

KIEP

지역경제 포커스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.kiep.go.kr 137-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4월 23일

ISSN 1976-0507 Vol. 3 No. 11

동유럽 금융위기 이후 EU의 대책과 전망

이 철 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(cwlee@kiep.go.kr, Tel: 3460-1071)

이 현 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(hjeanlee@kiep.go.kr, Tel: 3460-1226)

-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전 유럽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EU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은 물론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책 발표와 G-20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어짐.
- 최근 세 차례의 EU 정상회의를 통해 동유럽 금융위기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으며, EU의 주요 기구들은 경제회복과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시스템의 재건을 위한 투자 확대, 금융 규제·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함.
- EU 차원 및 개별 회원국별로 최근 경제회생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, 특히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EU 차원의 투자 및 금융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EU의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음.
- 이와 같은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EU 경제는 2010년에 들어서야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, 경제구조 및 정책결정 과정, 경기부양책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경제에 비해 더 장기적인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.
- 이처럼 향후 EU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예상됨은 물론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여타 선진권에 비해 다소 회의적인바, 우리의 대EU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됨.

1. 개요

■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전 유럽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EU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은 물론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책 발표와 G-20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어짐.

- 2009년 2월 중순부터 동유럽 금융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특별정상회의를 비롯한 세 차례의 EU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, 이 밖에도 EU집행위원회 회를 비롯해 EU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주요 기구들의 대응책 마련 등이 긴급하게 이루어짐.

-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및 차후 위기에 대한 예방책으로 금융지원,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관리, 금융 감독·감시기관의 확충 방안 등이 주로 제시·시행됨.

■ 최근 세 차례의 EU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으며, 특히 동유럽에 대한 지원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됨.

- 2월 22일 베를린 EU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동유럽에 대한 지원책이 EU 차원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으며, 3월 1일 동유럽 지원책 논의를 위한 특별 EU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관리 방안이 논의됨.

- 3월 19~20일 춘계 EU 정상회의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EU 차원의 투자 확대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·감독 강화를 결정함.

- 헝가리는 동유럽 금융권 회생을 위한 1,900억 유로의 특별구제기금 구성과 비유로지역 국가들의 조속한 유로지역에의 편입을 주장했으나, 특별구제기금 구성에 대해서는 독일, 폴란드, 체코 등의 반대로 최종합의 도달에 실패함.

■ EU집행위원회를 비롯한 EU의 주요 기구들은 역내 경제회복과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시스템 재건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 규제·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함.

- EU집행위원회는 2월 25일과 3월 4일 두 차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역내 은행의 부실자산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, 5월 중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임.

- 전 IMF 총재 자끄 드 라로지에르(Jacques de Larosiere) 주재로 2월 25일 개최된 ‘금융감독에 대한 특별 고위급 작업반 회의’에서 EU의 금융감독시스템 강화를 주장하는 라로지에르 보고서가 발표됨.

- 일반·대외관계이사회(Gener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Council) 및 재무장관 이사회(Ecofin Council)를 통해 EU 차원의 에너지 및 인프라부문 투자 확대와 EU 금융감독시스템 개혁, 개별 회원국들의 적자재정처리 등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짐.¹⁾

■ 전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국제금융기구들의 동유럽 금융시장 지원이 본격화되었으며, G-20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회복 및 금융시스템 정상화 등이 논의됨.

- 지난 2월 27일 국제금융기관 공동활동계획(Joint IFI Action Plan)을 통해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, 세계은행(World Bank), 유럽투자은행(EIB) 등이 공동으로 동유럽 은행에 245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함.

- 4월 2일 런던 G-20 정상회담에서 금융안정화이사회(Financial Stability Board)²⁾ 설치,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,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의 금융비용 조달 등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해 논의함.

■ 이처럼 동유럽 금융위기 심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EU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크게 동유럽 금융위기에 대한 지원과 EU의 경제회생에 초점이 맞추어짐.

2. 동유럽 금융위기 지원

■ 국제금융기구의 동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공동지원책 발표와 EIB 및 IMF의 기금확대 결정으로, 향후 동유럽 금융권 지원에 유입되는 자금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
- 향후 2년간 EBRD는 자산투자 및 자본금 지원 형태로 60억 유로, EIB는 중소기업 대출로 110억 유로, 세계은행은 금융권 대출 및 지원의 형태로 75억 유로를 출자하여 총 245억 유로가 동유럽에 투입될 예정임.

- EIB는 대출규모 확대를 위해 2,324억 유로로의 조기 자산 확대³⁾를 결정하였으며, 런던 G-20 정상회담에서는 IMF 기금을 2,500억 달러에서 3배 확대하여 7,500억 달러

1) 최근 일반·대외관계이사회는 지난 2월 23일과 3월 10일 두 차례 개최되었으며, 재무장관이사회도 지난 3월 10일 공식일정과 4월 3-4일 비공식 일정을 포함,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됨.

2) 금융안정화포럼(Financial Stability Board)이 확대·개편된 금융안정화이사회는 국경간 금융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금융감독기구로 출범시킬 예정임.

3) EIB는 4월 3일 기존의 1,654억 유로에서 670억 유로의 자본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함. 이는 2010년 예정이었던 자본금 확대를 1년 앞당겨 실시하는 것임.

를 확보하고, 특별인출권 2,500억 달러의 추가 확충을 결정함.

■ 구제금융 신청이 받아들여진 개별 회원국들은 EU집행위원회 및 IMF, 세계은행, EBRD로부터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약속 받음.

- 라트비아에는 2009년 1월 26일 EU 차원에서 31억 유로의 지원을 확정하고, 현재 이 중 10억 유로가 EU집행위로부터 분할 지급되었으며, 2011년 1사분기까지 세계은행, EBRD 및 주변국들로부터 75억 유로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.
- 헝가리에는 IMF가 125억 유로, 세계은행이 10억 유로, EU가 65억 유로로 총 200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며, 이 중 EU집행위로부터는 현재까지 20억 유로가 지급됨.
- 또한 지난 3월 25일 루마니아에 대해 IMF 130억 유로, 세계은행 10억 유로, EBRD 10억 유로, EU 50억 유로 등을 합해 2011년 1사분기까지 약 200억 유로의 금융지원이 결정됨.

표 1.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동유럽 EU 회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계획

	라트비아	헝가리	루마니아
IMF	17억 유로	125억 유로	130억 유로
세계은행	4억 유로	10억 유로	10억 유로
EBRD	4억 유로	-	10억 유로
EU BoP loan	31억 유로	65억 유로	50억 유로
주변국	19억 유로	-	-
합계	75억 유로	200억 유로	200억 유로

주: 2011년 1사분기까지 집행.

자료: IMF; World Bank; EBRD; EU집행위원회 등으로부터 필자 작성.

■ EU집행위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유럽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,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등 차후 규제강화 차원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임.

- 주주, 채권자 및 국가가 공동으로 부실 자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, 상기 가이드라인에 의해 금융기관의 자산 가치평가 하락 시 초래된 손실의 일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함.
- 부실자산에 대한 구제책은 △배드뱅크를 통한 자산매입관리와 △기록된 부실자산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국가가 보증하는 자산보증계획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.

- EU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이사회에서 채택된 라로지에르 보고서는 은행, 증권, 보험 등 전 금융부문에 대한 EU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적 예측·대비책 마련 등을 권고하고 있음.
- 동 보고서는 유럽은행국, 유럽증권국, 유럽보험국의 설치로 개별 국가들을 관리감독하고⁴⁾ 유럽구조적위험위원회(ESRC: European Systemic Risk Council)⁵⁾를 신설하여 ECB와 함께 금융시장의 위험을 미리 예측·대비하도록 제시함.
- 헤지펀드 및 조세피난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파생상품을 표준화·단순화하는 등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적절한 규제·관리 강화를 권고함.

3. EU의 경제회생정책

- EU 차원 및 개별 회원국별로 최근 경제회생을 위한 경기부양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EU는 향후 누적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적자재정 처리절차를 마련함.
- 많은 회원국들이 2008년 기편성한 예산에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발표하여 EU 지역의 확대된 재정지출은 2008년 말 결의한 EU의 GDP 대비 1.5%에서 3.3%로 확대된 4,000억 유로 규모임.⁶⁾
- 4월 3~4일에 개최된 특별 재무장관 이사회는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일부 회원국들에 대해 향후 과도한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처리절차(EDP: Excessive deficit procedure)를 적절히 적용하도록 함.⁷⁾

4) 기존의 유럽은행감독위원회, 유럽보험연금감독위원회, 유럽증권감독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관들로, 기존 기관들에는 없었던 일부 법적 강제권이 부여됨.

5) ECB 은행감독위원회(BSC: Banking Supervision Committee)를 확대·개편하는 것으로 EU 내 모든 거시적 위험에 대한 정보수집의 역할을 주로 담당함.

6) 2010년까지 개별회원국들의 계속적인 추경예산 편성이 예측되고 있는데, EU집행위원회는 EU 전체 GDP 대비 3~4% 사이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7) 안정성장협약(Stability and Growth Pact)은 GDP 대비 3% 이하의 재정적자 및 GDP 대비 60% 이하의 정부부채 규모를 설정, 이를 초과하는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감축을 위해 EDP를 규정하고 있으며,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~2010년 한시적으로 안정성장협약을 유예키로 함.

표 2. 2009~2010년 추가 경기부양 재정지출 비중

순위	회원국명	GDP 대비 %	순위	회원국명	GDP 대비 %
1	아일랜드	6.7	15	프랑스	2.2
2	영국	5.0	16	키프로스	2.0
3	스페인	4.9	17	불가리아	1.9
4	독일	4.7	18	슬로베니아	1.8
5	덴마크	4.6	19	슬로바키아	1.5
6	룩셈부르크	4.4	20	에스토니아	1.3
7	벨기에	4.3	21	체코	1.1
8	핀란드	4.1	22	폴란드	1.1
9	네덜란드	3.9	23	이탈리아	0.9
10	스웨덴	3.9	24	그리스	0.7
11	라트비아	3.8	25	리투아니아	0.5
12	오스트리아	3.3	26	헝가리	-0.3
13	포르투갈	3.1	27	몰타	-1.0
14	루마니아	2.9		유럽연합 전체	3.3

주: 2009년 1월 발표 기준.
자료: EU집행위원회.

■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국가보조를 통해 부실정도가 심각한 자국 금융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, EU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.

- EU집행위원회의 승인 하에 개별회원국 차원에서 긴급자금, 파산기금, 구조조정기금 등의 자금 지원, 보증, 자본 확충 등 다양한 형태로 자국 금융기관 지원 대책이 진행되고 있음.

표 3. 금융 및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 2008~2009년 승인된 국가지원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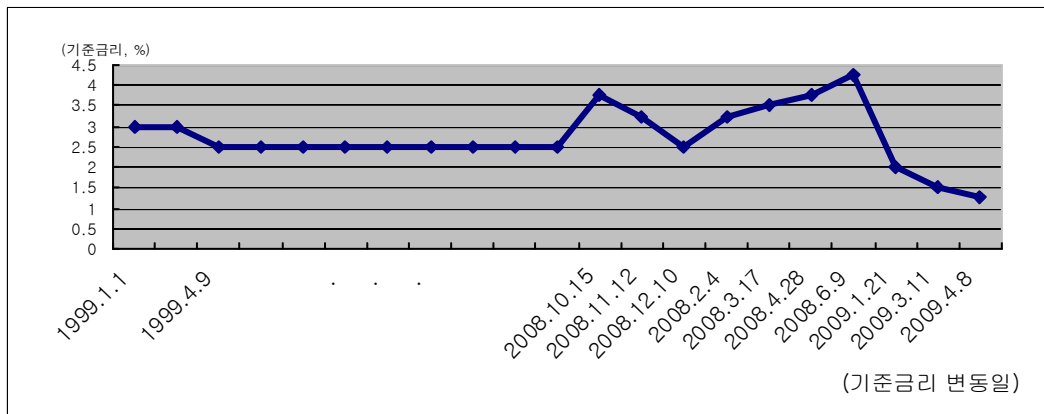
회원국명	금융부분 지원 승인 건수	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승인 건수	승인결정 평가를 진행 중인 건수
오스트리아	1		
벨기에	6		1
덴마크	4		
핀란드	2		
프랑스	4	5	1
독일	8	5	1
헝가리	1	3	
아일랜드	2		
라트비아	2		
룩셈부르크	2	2	1
네덜란드	6		
포르투갈	2	1	
슬로베니아	1		
스페인	2		
스웨덴	3		
영국	2	3	1

주: 3월 17일 집계 기준.
자료: EU집행위원회.

■ ECB 및 영란은행(Bank of England)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현재 ECB의 기준금리는 1.25%, 영란은행의 기준금리는 0.50%임.

- ECB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1월 21일 2.25%p, 3월 11일 0.5%p, 4월 8일 0.25%p를 인하하여 2009년 1월 초 이래 3차례에 걸쳐 총 3%p의 기준금리를 인하함.

그림 1. 유럽중앙은행(ECB)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



자료: ECB.

■ EU 차원에서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투자 금융지원 규모 확대를 통하여 EU의 경제회복을 꾀함.

- EU집행위원회의 행정적 지원과 EIB의 70억 유로 금융지원 등으로 자동차산업 및 하위 부품산업을 회생시켜 고용확충과 경제위기의 충격완화를 도모,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.
- 춘계 EU 정상회의는 인프라 사업에 50억 유로를 투자하고, 비 유로지역 회원국의 금융지원 자금규모를 기존의 250억 유로에서 500억 유로로 증액하여 EU 전체의 경기회복 및 금융위기 극복을 지원함.

4. 평가 및 전망

■ 최근 ECB의 기준금리 인하는 실질적 신용경색 완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며, 추후 ECB의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EU 내 경기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.⁸⁾

- 4월 8일 단행된 ECB의 기준금리 인하폭(0.25%p)은 OECD 보고서⁹⁾ 예상치인 0.5%p 인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, 이는 2009년 EU의 조속한 경제회복 전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됨.

■ EU 공식 통계기관 Eurostat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 EU의 경제성장률은 GDP 대비 0.2%, 2010년 1.1%로 다소 낙관적인 반면, 다른 기관들은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는 등 다소 비관적임.

- 최근까지의 경기변동 추세를 고려해 보면, EU측 전망보다는 2010년 이후부터 서서히 EU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외부 기관들의 전망이 보다 현실적임.

표 4. 2009년 EU27 및 유로지역에 대한 경제 전망

		경제성장률(%)			
		2007	2008 ¹⁾	2009 ²⁾	2010 ²⁾
EU27	Eurostat	2.9	0.9	0.2	1.1
	EIU	2.9	0.9	-3.3	-0.3
	IMF	3.1	1.3	-1.8	0.5
유로지역 ³⁾	Eurostat	2.6	0.8	0.1	0.9
	EIU	2.6	0.8	-3.4	-0.3
	IMF	2.6	1.0	-2.0	0.2
	세계은행	2.6	0.7	-2.7	0.9

주: 3월 31일 현재 각 기관 웹데이터 기준.

1) 추정치

2) 예상치

3) 유로지역은 2009년 1월 1일 슬로바키아 가입으로 16개국으로 확대됨.

자료: Eurostat; EIU; IMF, Global Economic Forecast 2009; World Bank.

■ 전술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EU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나 정책결정과정 및 운용상의 한계, 경기부양책 규모 등의 측면에서 EU경제가 미국 경제에 비해 더 장기적인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.

- EU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82.07%로 미국(30.76%)에 비해 월등히 높아 세계경제 침체에 의한 무역 감소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.
- EU는 27개국의 의견조율을 통해 주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데다, ECB의 금리정책은 전통적으로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.

8) 국제금융센터의 분석에 따르면, 신용경색 상황의 타격을 위해 1%로의 기준금리 추가인하와 ECB의 양적완화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있음. 「ECB의 양적완화정책 참여 가능성과 금융시장 영향」,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4월 3일자 참조.

9) OECD(2009.3), "OECD Economic Outlook, Interim Report".

- EU에는 통합된 감세조치¹⁰⁾가 없고 개별 회원국에서 독립적으로 재정정책을 진행하여, EU의 경기부양책 규모(GDP 대비 3.3%)가 2009, 2010년 모두를 합한 경우임을 감안 하면, 미국(11%)이나 일본(12.4%)보다 월등히 규모가 작아 상대적 경기부양 효과도 작을 것으로 분석됨.

표 5. EU의 수출입, 경제규모 및 무역의존도 비교(2008년)

	수출(백만 유로)	수입(백만 유로)	GDP(백만 유로)	무역의존도(%)
EU27	5,145,626.6	5,119,428.7	12,506,963.9	82.07
미국	1,264,210.0	1,719,200.4	9,698,531.4	30.76
일본	580,346.3	575,654.3	3,329,712.7	34.72

주: EU27의 수출입은 역내 교역을 포함하고 있음.
자료: Eurostat

- 이처럼 향후 EU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예상됨은 물론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여타 선진권에 비해 다소 회의적인바, 우리의 대EU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됨.

- 이러한 우려는 이미 2008년 말부터 현실화되고 있는데, [그림 2]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감소폭은 총수출의 감소 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.
- 이로 인해 2007년 15%를 초과하였던 우리의 대EU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에 13.8%로 축소되었고, 2009년 1~2월에는 13.6%에 그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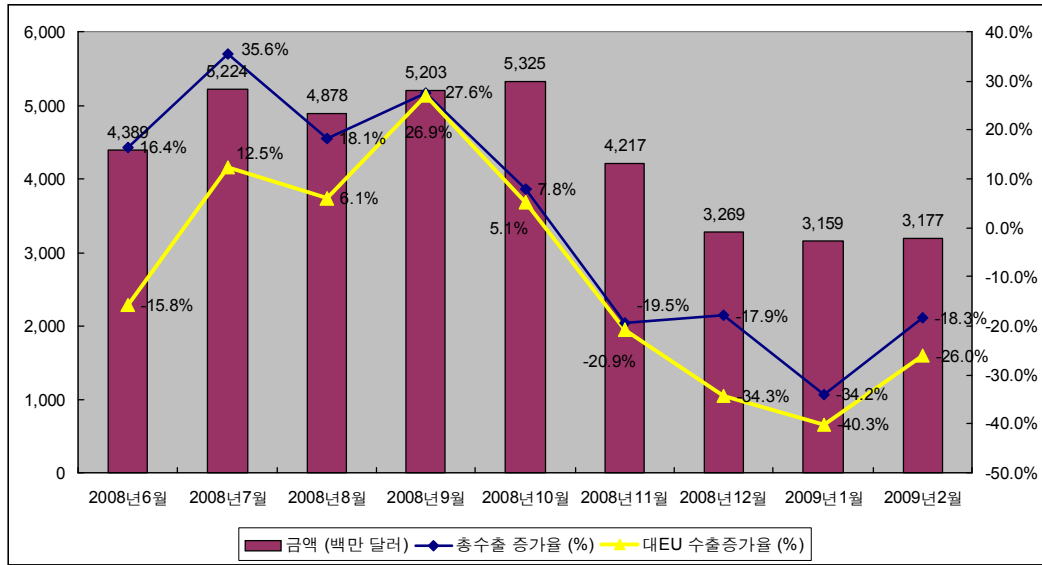
표 6.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EU 수출 동향

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 1-2월
금액(백만 달러)	24,887	37,830	43,659	48,450	55,982	58,375	6,336
총수출 중 대EU 수출 비중(%)	12.8	14.9	15.4	14.9	15.1	13.8	13.6
대EU 수출증가율(%)	14.7	52.0	15.4	11.0	15.5	4.3	-33.9

주: 전년동기대비; 2007년부터 EU27개국, 이전은 EU25개국.; 2009년 1, 2월은 누적자료.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10) EU 내 감세에 대한 의견은 많았으나 전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며, 일부 합의에 도달한 VAT 감세의 경우에도 아직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.

그림 2. 우리나라의 월별 대EU 수출 동향



주: 전년동기대비.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■ EU는 우리의 제2대 수출시장으로 현지시장의 최근 급격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출전략이 필요하며, 타결이 임박한 한·EU FTA 협정이 향후 대EU 수출신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EU 기업들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는바, 현지 완제품 시장보다는 부품 및 부분품 시장을 겨냥한 부품소재산업 중심의 유럽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됨.
- 또한 서유럽 선진국에서 수요기반이 튼튼하고 신규회원국에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,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제품 등의 대유럽 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.
- 최근 관세환급 등에서의 이견으로 완전 타결에 실패한 한·EU FTA 협정은 오는 5월중 타결이 기대되는바, 이를 염두에 둔 공격적인 대EU 수출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됨.¹¹⁾

11) 가령, 한·EU FTA 협정 체결로 관세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의 현지 마케팅에 집중, 사전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 등을 들 수 있음.